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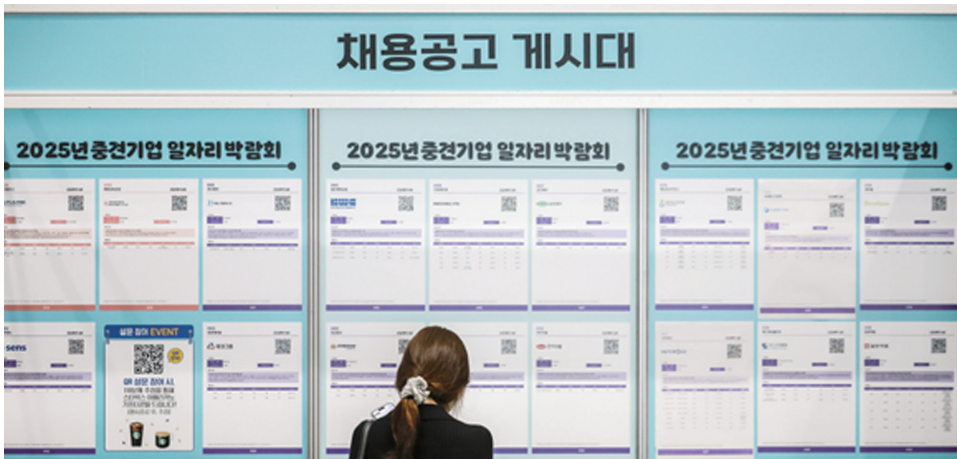
‘환승이직’이 답?...“공백 15일 넘어가면 ‘임금 하락’ 확률 ↑”

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자리 전환 분석
이직자 과반은 임금상승 경험...40.4%는 하락 경험
자발적 이직일수록, 소득수준 낮을수록 임금상승률 ↑
“임금하락 감수하는 이직 ‘상당’...소득안정성 필요”

퇴직 후 새 직장에 취직하는 공백기간이 15일을 넘어서게 되면 임금하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전환의 임금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직자 수는 전체 피보험자의 50% 수준에 달하며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일자리 전환’ 비율은 25~30%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전환은 2010년 이래로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 상실자

중 7일 이내 일자리를 전환한 비중은 24.0%, 15일 이내는 27.0%, 30일 이내는 28.8%, 90일 이내는 33.8%였다.
연구자가 이들의 임금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임금상승을 경험하는 비중은 56.0%였지만, 임금하락을 경험하는 비중도 40.4%였다.
특히 공백기간에 따라 임금 변화가 컸다. 임금하락을 경험한 비중은 ▲7일 이내 36.2% ▲8일~15일 35.4% ▲16일~30일 40.1% ▲31일~90일 37.0% ▲90일 초과 40% 이상으로, 공백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졌다.
일자리 이동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평균상승률이 49.7%로 매우 높았지만, 임금하락률도 35.1%에 달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률은 일자리 상실 후 8일에서 15일 이내 기간(53.8%)이었다.
공백기가 90일이 넘어가면 임금상승률이 최대 56.8%로 더욱 높아졌으나, 이 경우 임금하락률 역시 40.3%에 달해 양극화가 심해졌다.
연령대별로 15일 이내 이직한 경우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이 가장 높은 임금상승을 보였다.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일자리 전환을 통한 임금상승률은 크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40대 이후 상승세 둔화 추세는 다소 완화됐다.
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비자발적인 경우보다 임금상승률이 높았다.
임금소득계층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상승률이 둔화됐다. 고임금계층은 오히려 임금이 하락했다.
이 밖에도 비자발적으로 일자리 전환을 하는 경우 임금상승률은 0.3%에 불과해, 자



발적 이직자가 보인 9.6%의 상승률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이시균 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소득계층-연령별로 15일 이내 일자리 전환을 하는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상승 비중은 낮아지고 임금하락 비중은 높아졌다”며 “특히 고임금계층에서 50대 이상 연령층은 일자리 전환을 통해 60% 이상이 임금하락을 감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일자리 전환이 임금상승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으나 임금하락을 경험하는 비율도 상당하다”며 “임금하락을 감수하는 일자리 전환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은 실업을 회피하는 성향이 높은 집단이 다수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일자리 상실 시 소득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승호 기자



‘SKT 유심 해킹사태’ 유통·물류업계 보안강화

6일 서울 시내 SKT 매장 전광판에 유심 교체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며 유통·물류업계도 보안을 강화하고 나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계열사들의 통합아이디 서비스에서 SKT와 SKT 알뜰폰 고객의 본인인증을 중단했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물류업계도 시스템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6일 서울 시내 SKT 매장 전광판에 유심 교체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며 유통·물류업계도 보안을 강화하고 나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계열사들의 통합아이디 서비스에서 SKT와 SKT 알뜰폰 고객의 본인인증을 중단했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물류업계도 시스템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완도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부상자 모두 퇴원...전남도, 특별 안전점검 실시

전남도가 완도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계기로 소방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군과 함께 도내 관광숙박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안전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56분께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일산화탄소가 객실 내부로 유입되면서 투숙객 1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신속한 구조 조치로 당일 오후 모두 호전돼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내 관광숙박시설 421곳과 일반숙박시설 2200여 곳, 집중안전점검 대상인 어린이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등 1500여 곳에 대해 가스·전기·소방시설 등 분야별 집중 안전점검을 시·군, 소방본부, 가스안전공사와 시공사,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객실 내 가스·전열기기 안전상태 ▲비상 대피동선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가스누출과 경보기·비상 차단장치 작동 여부 등이다.

특히 100객실 이상 보유 관광숙박시설 19곳의 경우 도와 시·군, 소방본부,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5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402곳은 시·군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가정의 달 연휴에 발생한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도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로 입원 후 퇴원한 14명을 포함 투숙객 69명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 세심하게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중대 결함은 사용금지·철거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숙박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

20년 넘게 고객 예금 15억 빼돌린 신협 직원

20년 간 신협에 재직하면서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해 15억원이 넘는 고객 예금을 빼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유죄판결을 6일 밝혔다.
A씨는 도내 한 신협에서 예금 업무에 종사하며 지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87회에 걸쳐 고객들이 개설한 예금 약 15억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예금청구서와 전자출금전표 등을 위조·위작해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곳에서 20년 넘는 기간 동안 예금 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는 실적을 위해 높은 이자율을 미끼로 예금 가입을 유도했고, A씨와 안면이 있던 피해자들은 그를 믿고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하지만 A씨는 이들이 맡긴 예금을 문서 위조 등을 통해 몰래 인출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예금 계좌 전액을 인출하기 위해 예금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도장까지 임의로 날인했다. 전자출금전표 등도 본인이 직접 서명해 시스템 상 피해자들이 직접 예금을 인출한 것처럼 조작했다.
A씨는 이렇게 몰래 빼돌린 예금을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비용 등에 사

용했다. A씨의 횡령은 피해자들이 뒤늦게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예금 잔고가 비어있음을 깨달으면서 드러났다.
법정에서 그는 경찰에 자수했다는 사실과 높은 이자가 실제로 지급됐고 횡령한 예금 중 실제 쓴 금액의 대부분이 변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억원 정도의 예금 중 실제 쓴 금액이 2억80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대부분 변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용 금액 등을 명확히 특정할 증거가 없다”며 “장기간 높은 이자를 지급한 것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20여 년간 범행이 지속될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들이 돈을 달라고 요구해 변제를 해준 뒤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했다”이라며 “자수 전 회사에 출금해 피해자들의 통장과 잔고를 정리한 엑셀 파일 등을 없앤 걸 볼 때 이 자수가 순수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장기간 치밀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협의 신뢰·명예와 함께 피고인을 믿고 가족들의 재산까지 맡긴 피해자들의 신뢰도 모두 무너졌다”며 “이 범행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서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까지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승권기자

광주 충장축제 용역사 “진행요원 야근수당 지급” 소송 일부 승소

법원 “동구, 직접 계약 관계 아니라 지급 의무 없다”

광주 동구가 해마다 개최하는 ‘충장축제’ 대행사의 협력 업체가 진행 요원의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축제 감독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동구는 용역비 지급 책임이 없지만, 보전 약속으로 법적 청구 절차를 단념케 한 축제 감독은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헌 부장판사는 이벤트 업체 A사가 광주 동구와 축제 감독 중 1명인 B씨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장은 “감독 B씨는 A사에 5700만원과 자연손해금을 지급하라. A사의 동구에 대한 청구와 B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동구는 2023년 10월5일부터 9일까지 펼

쳐진 ‘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개최하면서 축제 사무국을 꾸렸고, 대행사는 협력 업체로 A사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A사는 축제 행사에 진행 요원을 투입하며 용역을 수행했다. 축제를 전담하는 동구청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B씨를 비롯한 축제 감독단들은 A사에 진행 요원의 야근 근무 투입을 요구했다.
A사는 야간 근무를 한 진행 요원의 연장수당으로 5700여 만원을 지급했으며, 축제가 끝난 뒤 추가 용역비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감독 B씨는 A사에 미지급분을 자신이 책임 지고 다른 행사에서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추가 용역비를 발주처인 광주 동구가 부담해야 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했던 B씨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A사는 대행사의 협력업체로서 대행사에 추가용역비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동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용역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동구의 용역비 지급 의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으나 다른 행사를 통해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 A사가 동구나 대행사에 용역비 관련 법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포기하게 했다. 추가 용역비를 보전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A사로서는 B씨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사회상규 상 상당한 가일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B씨에 직접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다. 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A사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희면기자